

'25년 경찰공무원(경정이하) 정기 승진시험

- 1교시(09:20 ~ 10:50) -

목 차	
【헌 법】	1
【경 찰 행 정 학】	8
【경 찰 실 무 종 합】	12
【형 법】	17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자는 답안 작성 시 반드시 과목 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경 찰 청

사이버경찰청 : <http://www.police.go.kr>

원서접수사이트 : <http://gosi.police.go.kr>

【헌 법】

1. 헌법 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어떤 법률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그 어의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헌법을 최고 법규로 하는 통일적인 법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을 택해야 한다.
- ②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0년의 보호감호에 처한다. 다만, 보호대상자가 50세이상인 때에는 7년의 보호감호에 처한다.”)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 하여금 감호청구의 이유 유무 즉, 재범의 위험성의 유무를 불문하고 반드시 감호의 선고를 하도록 강제한 것임이 위 법률의 조항의 문의임은 물론 입법권자의 의지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조항에 대한 합헌적 해석은 문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 ③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구속”을 형사절차상 구속뿐 아니라 행정절차상 구속까지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해석의 한계를 넘는다.
- ④ 합헌적 법률해석은 어디까지나 법률조항의 문언과 목적에 비추어 가능한 범위 안에서의 해석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법률조항의 문구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입법자의 명백한 의사에도 불구하고 문언상 가능한 해석의 범위를 넘어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2. 헌법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일반조항인 헌법 제119조는 그 자체로 기본권의 성질을 가지고 독자적인 위헌심사의 기준이 되는 것이며 단순히 국가의 경제정책에 대한 하나의 헌법적 지침으로 볼 수 없다.
- ② 헌법적 신뢰보호는 개개의 국민이 어떠한 경우에도 ‘실망’을 하지 않도록 하여 주는데까지 미칠 수는 없는 것이며, 입법자는 구법질서가 더 이상 그 법률관계에 적절하지 못하며 합목적적이지도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 수혜자군을 위하여 이를 계속 유지하여 줄 의무는 없다.
- ③ 의회민주주의원리는 국가의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한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유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의사결정과정의 민주적 정당성까지 요구한다.
- ④ 주민자치제를 본질로 하는 민주적 지방자치제도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린 현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을 지방의회의원 선거권, 나아가 국회의원 선거권 및 대통령 선거권과 구별하여 하나는 법률상의 권리로, 나머지는 헌법상의 권리로 이원화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3. 포괄위임입법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입법의 위임은 법률로써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 위임범위의 구체성 및 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규제 대상의 종류 및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② 헌법 제75조가 요청하는 위임입법의 예측가능성은 법규명령의 내용으로부터 예견 가능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시행령의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면 위임입법의 포괄성 문제는 해소된다.
- ③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졸업하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때’에는 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에서 대통령령에 규정될 ‘교통사고’가 어떤 종류나 범위의 것이 될 것인지에 관한 대강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규정을 보아도 이를 예측할만한 단서가 없어 ‘교통사고’ 부분의 위임은 지나치게 포괄적인 것으로서 예측가능성을 주지 못한다.
- ④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등’ 전용차로로의 통행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단서는 전용차로의 설치 목적, 법문에 규정하고 있는 예외 사유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없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4.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은 공무원의 신분보장 및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다.
- ②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다.
- ③ 1972년 제7차 개정헌법은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다.
- ④ 1987년 제9차 개정헌법은 신체의 자유와 관련하여 적법절차 조항을 신설하였다.

5. 정당과 선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편차의 기준을 인구편차 상하 33⅓%, 인구비례 2:1을 넘어 인구편차를 완화하는 것은 지나친 투표가치의 불평등을 야기한다고 볼 수 없다.
- ② 경찰청장이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한 구 「경찰법」 제11조 제4항은 경찰청장의 정당 설립 및 가입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다.
- ③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한 직접선거의 원칙은 의원의 선출뿐만 아니라 정당의 비례적인 의석확보도 선거권자의 투표에 의하여 직접 결정될 것을 요구한다.
- ④ 선거권자의 국적이나 선거인의 의사능력 등 선거권 및 선거제도의 본질상 요청되는 사유에 의한 내재적 제약을 제외하고 보통선거의 원칙에 위배되는 선거권제한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권제한입법에 관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6. 공무원제도 및 공무담임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직업공무원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제도적 보장 중의 하나이므로 입법자는 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하여 ‘최대한 보장’의 원칙의 한계 안에서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 ② 우리나라는 직업공무원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근로관계를 맺고 이른바 공법상 특별권력관계 내지 특별행정법관계 아래 공무를 담당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협의의 공무원을 말하며 임시적 공무원도 포함된다.
- ③ 일단 공무원으로 채용된 공무원을 퇴직시키는 것은 공무원이 장기간 쌓은 지위를 박탈해 버리는 것이므로 당연퇴직사유를 임용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④ ‘승진시험의 응시제한’이나 이를 통한 승진기회의 보장 문제는 공직신분의 유지나 업무수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단순한 내부 승진인사에 관한 문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

7.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근거와 그 제한의 한계를 설정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은 “법률”로써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기본권의 제한이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직접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는 예외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엄격히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한다.
- ②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는 군 장교를 배출하기 위하여 국가가 모든 재정을 부담하는 특수교육기관인 육군3사관학교의 구성원으로서, 학교에 입학한 날에 육군 사관생도의 병적에 편입하고 준사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존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 국민보다 상대적으로 기본권이 더 제한될 수는 없다.
- ③ 대상법률이 형성법률인 경우 위헌성 판단은 기본권 제한의 한계 규정인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과잉금지 내지 비례의 원칙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형성법률이 그 재량의 한계인 자유민주주의 등 헌법상의 기본원리를 지키면서 관련 기본권이나 객관적가치질서의 보장에 기여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 ④ 법치국가원리의 한 표현인 명확성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모든 기본권제한 입법에 대하여 요구되지만 민사법규는 행위규범의 측면이 강조되는 형벌법규와는 달리 기본적으로는 재판법규의 측면이 훨씬 강조되므로, 사회현실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흠결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보다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가능하다고 본다.

8. 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법인은 사단법인·재단법인 또는 영리법인·비영리법인을 가리지 아니하고 일정한 한계내에서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라고 하더라도 대표자의 정함이 있고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때에는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당하게 되면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기본권의 주체만 청구할 수 있는데, 단순히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인간의 권리’로 볼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해서는 외국인도 기본권의 주체이지만, 청구인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성질상 국민의 권리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인 외국인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 ㉢ 상공회의소는 사업범위, 조직, 회계 등에 있어서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규율을 받고 있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관할구역의 상공업계를 대표하여 그 권익을 대변하고 회원에게 기술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 회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임으로써 상공업의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 목적이나 설립, 관리 면에서 자주적인 단체로 사법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상공회의소와 관련해서도 결사의 자유는 보장된다.
- ㉣ 학교가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는 공적 정보에 해당하므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정보 공개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기본권 수범자의 지위에 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9. 기본권 보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주거지역에서 출근 또는 등교 이전 및 퇴근 또는 하교 이후 시간대에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을 제한하는 등 사용 시간과 사용지역에 따른 수인한도 내에서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 규제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이다.
- ② 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서 산업단지의 지정권자로 하여금 산업단지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와 동시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를 진행하도록 한 의견청취동시진행조항은 환경상 위해로부터 지역주민을 포함한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위배된다.
- ③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된 자 중 국외 강제동원자에 대해서만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은 국내 강제동원자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매우 불충분하므로 국민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위배된다.
- ④ 원자력발전소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는 「전원개발촉진법」 조항은 비록 「원자력안전법」에서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원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위배된다.

10. 인격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은 낙태로 나아갈 의도가 없는 부모까지 규제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과도한 입법으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일반적 인격권에서 나오는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
- ② 헌법이 보호하는 명예권은 그 기본권 주체가 가지고 있는 인격과 명예가 부당하게 훼손되는 것의 배제를 청구할 권리이지, 국가가 기본권 주체에게 최대한의 사회적 평가를 부여하도록 국가에게 요청할 권리라고 볼 수는 없다.

- ③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아동이 사람으로서 인격을 자유로이 발현하고, 부모와 가족 등의 보호하에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는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독자적 기본권이다.
- ④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인지청구의 소의 제소기간을 부 또는 모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로 규정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하여 인지청구를 하고자 하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11.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가해학생과 함께 그 보호자도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가해학생 보호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② 한자를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내지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의 한 내용이다.
- ③ 가사소송에서 본인출석주의를 규정한 「가사소송법」 조항은 가사소송 당사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④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의 자유’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되는 행복추구권의 구체적인 한 표현인 일반적 행동자유권 내지 사적자치권으로 보장되는 것이다.

12. 평등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중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만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고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 할 것이므로 난민인정자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 ② 특정한 조세 법률조항이 혼인이나 가족생활을 근거로 부부 등 가족이 있는 자를 혼인하지 아니한 자 등에 비하여 차별 취급하는 것이 과세단위를 설정하는데 있어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재량에 속하는 정책적 문제라면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단지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의 유무만을 확인하는 정도로 심사하여야 한다.
- ③ 중혼의 취소청구권자로 직계존속과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규정하면서도 직계비속을 제외한 「민법」 조항에 대해, 평등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혼의 취소청구권자를 어느 범위까지 포함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의 입법재량의 폭이 넓은 영역이라 할 것이므로 자의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족하다.
- ④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정기적성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형벌을 과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조항은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를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과 달리 취급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13.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생명권의 제한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곧바로 개인의 생명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본다면, 이는 생명권을 제한이 불가능한 절대적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 ②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대상범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받아 확정된 사람으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은 과도하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③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 대하여 열 손가락의 지문을 날인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신체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신체활동의 자유를 제약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④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정신보건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14.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 ② 국회에서 허위의 진술을 한 증인을 위증죄로 처벌하는 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형법」상 위증죄보다 무거운 법정형을 정하고 있어 형벌체계상의 정당성이나 균형성을 상실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 ③ 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주거침입강간죄와 동일하게 규정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④ 「형법」상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하고 있는 것은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지 않아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15. 적법절차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 제12조 제1항은 적법절차원칙의 일반조항이고, 제12조 제3항의 적법절차원칙은 기본권 제한 정도가 가장 심한 형사상 강제처분의 영역에서 기본권을 더욱 강하게 보장하려는 의지를 담아 중복 규정된 것이다.
- ② 적법절차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작용인 과징금 부과 절차에 있어서도 적법절차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 ③ 징벌형의 조사를 위하여 14일간 청구인을 조사실에 분리수용하고 공동행사참가 등 처우를 제한한 교도소장의 행위에 대해 법원에 의한 개별적인 통제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는 점만으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④ 전자우편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의 경우에도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피의자 등이 압수수색 사실을 사전 통지받을 권리 및 이를 전제로 한 참여권을 제한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16. 영장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행정상 즉시강제는 상대방의 임의이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하명 없이 바로 실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그 본질상 급박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법관의 영장을 기다려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 ㉡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 조항은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 또는 그 유지 여부의 필요성에 관하여 한 재판의 효력이 검사나 다른 기관의 이견이나 불복이 있다 하여 좌우되거나 제한받는다면 이는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 ㉣ 현행범을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를 사후영장의 청구 기간으로 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입법재량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7.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역시 다른 모든 헌법상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지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중 하나인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법률로써도 제한할 수 없다.
- ②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의 경우에도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보장된다.

- ③ 변호인과 상담하고 조언을 구할 권리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중 구체적인 입법형성이 필요한 다른 절차적 권리의 필수적인 전제요건으로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그 자체에서 막바로 도출된다.
- ④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변호인과 사이의 충분한 접견교통을 허용함은 물론 교통내용에 대하여 비밀이 보장되고 부당한 간섭이 없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취지는 접견의 경우뿐만 아니라 변호인과 미결수용자 사이의 서신에도 적용된다.

18. 주거 및 거주·이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보호에 있어서 용의자에 대한 긴급보호를 위해 그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라면 그 긴급보호가 적법한 이상 주거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긴급보호가 적법한 이상 그 긴급보호 과정에서 청구인의 주거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 ② 헌법 제16조 후문은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지만,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에 대해서도 그 예외를 인정하되, 그 장소에 범죄혐의 등을 입증할 자료나 피의자가 존재할 개연성이 소명되고,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③ 거주·이전의 자유는 구체적으로는 국내에서 체류지와 거주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자유영역뿐 아니라 국외에서 체류지와 거주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해외여행 및 해외 이주의 자유’를 포함하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 ‘국적변경의 자유’ 등도 그 내용에 포섭된다.
- ④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이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구 「지방세법」 조항은 인구유입과 경제력 집중의 효과가 뚜렷한 건물의 신축, 증축 그리고 부속토지의 취득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정하여 부당하게 중과세할 소지를 제거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인구유입 또는 경제력 집중을 유발하는 효과가 없는 경우까지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법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

19.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변호사에게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은 변호사의 영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은밀한 것으로 내밀한 개인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한 것은 변호사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 ② 헌법 제17조가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권은 ‘사생활영역’의 자유로운 형성과 비밀유지라고 할 것이며, 공적인 영역의 활동은 다른 기본권에 의한 보호는 별론으로 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 ③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는 자에 대해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판결로 3년 이상 20년 이하의 기간 동안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④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는 중에 좌석안전띠를 착용할 것인가 여부의 생활관계는 개인의 전체적 인격과 생존에 관계되는 ‘사생활의 기본조건’이라거나 자기결정의 핵심적 영역 또는 인격적 핵심과 관련된다고 보기 어려워 더 이상 사생활영역의 문제가 아니다.

20.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②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교도소 등에서 출소한 후 7일 이내에 출소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정한 「보안관찰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그 대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③ 개인별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 조항은 주민등록번호 불법 유출 등을 원인으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 ④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은 성명이 공개된 사람의 합격 사실 뿐만 아니라 위 정보를 결합하여 특정인의 불합격 사실도 알 수 있으므로 응시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21. 통신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 제18조는 통신의 비밀보호를 그 핵심내용으로 하는 통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자유로운 의사소통은 통신 내용의 비밀을 보장하는 것만으로 충분하고 구체적인 통신으로 발생하는 외형적인 사실관계, 특히 통신관계자의 인적 동일성·통신시간·통신장소·통신횟수 등 통신의 외형을 구성하는 통신 이용의 전반적 상황의 비밀까지도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통신수단의 자유로운 이용’에는 자신의 인적 사항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는 상태로 통신수단을 이용할 자유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 ③ 교도소장이 수용자에게 온 서신을 개봉한 행위는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지만 법원, 검찰청 등이 수용자에게 보낸 문서를 열람한 행위는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④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은 수사 또는 내사의 대상이 된 가입자 등의 동의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도 공공기관이 아닌 전기통신사업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에 해당되어 헌법상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22. 종교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전파의 자유로서 누구에게나 자신의 종교 또는 종교적 확신을 알리고 선전하는 자유가 포함되는데, 이러한 종교전파의 자유는 국민에게 그가 선택한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한다고 할 수 없다.
- ② 지방자치단체가 유서 깊은 천주교 성당 일대를 문화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상급 단체로부터 문화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 받은 후 사업부지 내 토지 등을 수용재결한 사안에서, 문화관광지 조성계획의 승인과 그에 따른 토지 등 수용재결은 헌법의 정교 분리원칙이나 평등권에 위배된다.
- ③ 헌법상 종교의 자유는 국민을 종교와 관련된 공권력의 강제와 개입으로부터 보호하지만, 종교의 자유로부터 종교를 이유로 국민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세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률 적용의 면제 등 적극적인 우대조치를 요구할 권리까지 직접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 ④ 종교교육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학교나 학원이라는 교육기관의 형태를 취할 경우에는 구 「교육법」이나 구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규정에 의한 규제를 받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종교교육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23.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광고가 단순히 상업적인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공익을 포함하는 때에는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된다.
- ㉡ 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 제2항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주장을 표시 또는 상징하는 복장을 하거나 관련 물품을 착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 ㉢ 사전검열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데, 여기에서 절대적이라 함은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 표현에 대해서는 사전 검열금지원칙이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의미이다.
- ㉣ 광고의 심의기관이 행정기관인지 여부는 기관의 형식에 의하기 보다는 그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지만, 행정기관이 자의로 민간심의기구의 심의업무에 개입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개입 가능성의 존재 자체만으로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① ㉠(O) ㉡(O) ㉢(X) ㉣(X) ② ㉠(O) ㉡(X) ㉢(O) ㉣(X)
- ③ ㉠(X) ㉡(O) ㉢(X) ㉣(O) ④ ㉠(X) ㉡(X) ㉢(O) ㉣(O)

24. 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알리고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정복(正服)을 입고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옥내집회 장소에 출입하는 것은 직무 집행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두 신고서를 모두 반려한다.
- ㉢ 단체 또는 단체의 구성원들이 유리한 경우에는 설립의 근거 법률에 따른 특혜를 누리거나 요구하다가, 제한에 대해서는 사적조직임을 강조하면서 결사의 자유의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에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순수한 사적인 임의결사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경우의 심사에 비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 농협 조합장 선출행위는 결사 내 업무집행 및 의사결정기관의 구성에 관한 자율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으므로, 농협 조합장의 임기와 조합장선거의 시기에 관한 사항은 결사의 자유의 보호 범위에 속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5. 재산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해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에 관한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한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 중 제1014조에 관한 부분은 제척기간을 통한 법적 안정성만을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외면한 것이므로 상속개시 후 인지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 ②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설립된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한 「의료급여법」 제11조의5 제1항 중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의료급여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③ 살처분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사육농가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보상금을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한다고 규정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1항 제3호 단서는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가축의 소유자라 하여 살처분 보상금을 오직 계약사육농가에게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재산권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에 적절한 보상조치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입법형성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가축의 소유자인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 ④ 퇴역연금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퇴역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한 구 「군인연금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중 ‘지방의회의원’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퇴역연금 수급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26.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직업의 자유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되는 ‘직업’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 소득활동’을 의미하는바, 단순한 여가활동이나 취미활동, 겸업이나 부업은 직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② 자연인인 변호사의 영리행위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겸직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법」 조항을 법무법인에 대하여 준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법무법인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③ 법무사 1인이 채용할 수 있는 사무원의 수를 5인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법무사규칙」 조항은 소속 지방법무사협회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5인을 초과하는 사무원 채용을 승인하는 등의 대안이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것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법무사인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④ 게임 결과물의 환전은 게임이용자로부터 게임 결과물을 매수하여 다른 게임이용자에게 이윤을 붙여 되파는 것으로, 이러한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계속적인 소득활동이 될 수 있으므로 게임 결과물의 환전업은 헌법 제15조가 보장하고 있는 직업에 해당한다.
27. 참정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 제72조는 국민투표에 부쳐질 중요정책인지 여부를 대통령이 재량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국민의 직접적인 의사를 확인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전체적인 헌법체제와 조화를 이룰 수 없다.
 - ② 대통령은 헌법상 국민에게 자신에 대한 신임을 국민투표의 형식으로 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이면서 이에 자신의 신임을 결부시키는 대통령의 행위도 위헌적인 행위로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③ 헌법 제117조 및 제118조를 통해 대의제 또는 대표제 지방자치 보장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주민투표권은 국민투표권과 같이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다.
 - ④ 「국민투표법」에 의하면,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28.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방부장관, 각군 참모총장 및 관할관이 군판사 및 심판관의 임명권과 재판관의 지정권을 갖고 심판관은 일반장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군사법원법」 조항은 군사법원의 헌법적 한계를 일탈하여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고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 ② 헌법 제27조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 적어도 한번의 재판을 받을 권리, 적어도 하나의 심급을 요구할 권리이고, 심급제도가 몇 개의 심급으로 형성되어야 하는가에 관하여는 헌법이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권에 맡겨져 있는 것이다.
 - ③ 사법보좌관에게 「민사소송법」에 따른 독촉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원조직법」 조항 중 ‘민사소송법에 따른 독촉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에 관한 부분은 입법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자의적인 입법으로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
 - ④ 판결주문에 영향이 없는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판단이 누락된 경우와 달리 판결주문과 간접적으로만 연관되는 판단이 이유가 누락된 경우에는 재심의 소를 통해 기판력 등 확정된 판결의 효력을 배제하는 것이 재심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29.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하면, ‘범죄피해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는 제외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 ②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범죄피해의 범위에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피해의 경우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구 「범죄피해자구조법」 조항은 현저하게 불합리한 자의적인 차별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 ③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하면, 유족구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18조 규정에서 열거한 순서로 하며, 부모의 경우에는 친부모를 선순위로 하고 양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 ④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범죄피해자구조법」 조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0.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생활능력 없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의 규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지만, 그 기속의 의미는 적극적·형성적 활동을 하는 입법부 또는 행정부의 경우와 헌법재판에 의한 사법적 통제기능을 하는 헌법재판소에 있어서 동일하지 아니하다.
 - ②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 유족급여 등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인 연금수급권은 일부 재산권으로서의 성격과 사회보장수급권의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입법자로서는 연금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을 정함에 있어 이를 전체로서 파악하여 어느 한 쪽의 요소에 보다 중점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 ③ 재혼을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로 규정한 구 「공무원연금법」 조항 중 ‘유족연금’에 관한 부분은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부양의 필요성과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유족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재혼한 배우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 ④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은 지급대상자의 범위 파악과 보상수준의 결정에 있어서의 용이성, 국가의 재정적 상황 등 입법정책적 상황을 고려한 것이며, 보상금 이외에 생활조정수당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게 최소한의 물질적 수요를 충족시켜주고 있으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31.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청소년은 인격의 발전을 위하여 어느 정도 부모와 학교의 교사 등 타인에 의한 결정을 필요로 하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인격체이므로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의 범주 내에서도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 ② 헌법 제31조 제1항에 의해서 보장되는 교육을 받을 권리는 자신의 교육환경을 최상 혹은 최적으로 만들기 위해 타인의 교육시설 참여 기회를 제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기본권까지 포함하므로, 기존의 재학생들에 대한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해질 수 있음을 이유로 새로운 편입학 자체를 하지 말도록 요구하는 것은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으로 포섭될 수 있다.
 - ③ 헌법 제31조 제3항의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은 의무교육을 위탁 받은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 등과의 관계에서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미 학교법인이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비까지 중국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 ④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중 그 의사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것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권리, 즉 자유권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제한에 대하여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원칙에 의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32. 근로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는 내용은 1948년 제헌헌법부터 계속하여 헌법에 규정되어 왔다.
 - ② 헌법에서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③ 헌법에서는 여자, 장애인,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④ 헌법에서는 국가유공자, 상이군경의 유가족, 전몰군경의 유가족에 대한 근로의 기회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33. 환경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환경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국민은 국가로부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기도 하는바, 환경권은 그 자체가 종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 ② 국가와 국민이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에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이 되는 제반 환경이 훼손되고 생명·신체의 안전 등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기후변화의 원인을 줄여 이를 완화하거나 그 결과에 적응하는 조치를 하는 국가의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의 의무도 포함된다.
 - ③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조는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바,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하도록 규정한 동법 제8조 제1항에서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에 대하여 어떤 형태의 정량적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국민인 청구인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 ④ 국가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이른바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바, 개별 사례에서 과소보호금지원칙 위반 여부는 기본권 침해가 예상되어 보호가 필요한 ‘위험상황’에 대응하는 ‘보호조치’의 내용이, 문제 되는 위험상황의 성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34.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이름은 인간의 모든 사회적 생활관계 형성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질서에 속하고, 이름의 특징은 사회 전체의 법적 안정성의 기초이므로 이를 위해 국가는 개인이 사용하는 이름에 대해 일정한 규율을 가할 수 있다.
 - ② 육아휴직신청권은 헌법 제36조 제1항 등으로부터 개인에게 직접 주어지는 헌법적 차원의 권리라고 볼 수 있다.
 - ③ 남성 단기복무장교를 육아휴직 허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구 「군인사법」 조항 중 육아휴직 부분은 국가가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양육권 보장을 위해 이행하여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것이다.
 - ④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가의 일반적 과제를 규정하고 있는바, 양육비 채권의 집행권원을 얻었음에도 양육비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행을 용이하게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입법 의무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35. 권력분립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우리 헌법에서 권력분립원칙은 권력의 분할뿐만 아니라 권력간의 상호작용과 통제의 원리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국가기관 상호 간의 통제 및 협력과 공조’는 권력분립원칙에 대한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
 - ② 권력분립의 원리는 인적인 측면에서도 입법과 행정의 분리를 요청하고, 만일 행정공무원이 지방입법기관에서라도 입법에 참여한다면 권력분립의 원칙에 배치되므로 공무원의 경우는 지방의회의원의 입후보제한이나 겸직금지가 필요하다.

- ③ 정치적·행정적 수요에 발맞추어 위임입법을 허용하되 그와 함께 권력분립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하여나 법치주의의 원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위임입법에 대한 통제도 필요하다.
 - ④ 권력분립원칙에서는 국가권력 간의 엄격한 절연이 요구되므로 헌법상의 국가기관 상호 간에 기능을 분담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대통령이 국무총리·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에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공동으로 관여하도록 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6. 국회와 국회의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회는 의안 심의에 관한 국회운영의 원리로 ‘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소관 위원회는 「국회법」 제58조에 따라 법률안에 대한 심사권을 가진다.
 - ② 헌법 제49조에 의하면,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가결된 것으로 본다.
 - ③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受理)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④ 국회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언할 내용이 담긴 보도 자료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의 당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에게 사전에 배포한 행위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직무부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7. 행정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 제89조의 국무회의 심의사항에는 ‘정부 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이 포함된다.
 - ② 헌법 제66조 제4항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86조 제2항은 대통령의 명을 받은 국무총리가 행정각부를 통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대통령과 행정부, 국무총리에 관한 헌법 규정의 해석상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에는 모든 행정기관이 포함된다.
 - ③ 대통령이 국회에 과병동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과병 정책을 심의, 의결한 국무회의의 의결은 국가기관의 내부적 의사결정행위가 아닌 법적 구속력을 가진 행위이며, 그 자체로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
 - ④ 헌법 제75조 및 제95조에 비추어 볼 때, 입법자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령이 아닌 부령에 입법사항을 위임할 수는 없다.
38. 헌법재판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하고,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 ③ 현행 헌법재판제도는 전원재판부의 재판관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재판관의 결원은 곧 합헌 또는 기각의견이 확정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야기하게 되므로, 당사자가 1명의 재판관만 기피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자체로 기피신청 당사자에게 불리한 재판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이다.
 - ④ 위헌법률의 심판과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하고,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한다.

39. 위헌법률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위헌법률심판에 있어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 ②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며,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급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③ 위헌결정된 법률에 의하여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4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가 발부한 형집행장에 의하여 검거된 벌금미납자의 신병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경찰공무원은 공법상의 권한을 행사하는 공권력행사의 주체일 뿐이지,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청구인 적격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②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항으로 인해 공직의 상실이라는 개인적인 불이익과 연관된 공무담임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③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는 헌법소원의 본질상 대한민국 국가기관의 공권력 작용을 의미하고 외국이나 국제기관의 공권력 작용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④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에서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직접성의 요건이 인정된다.

【경찰행정학】

1. 롤스(J. Rawls)의 정의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원초적 상태라는 가상적 의사결정 상황의 전제로 무지의 베일과 상호 무관심한 합리성을 제시한다.
- ② 인간은 원초적 상태에서 최대극소화의 원리에 바탕하여 규칙을 선택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 ③ 정의의 제1원리는 기본적인 자유의 평등 원리(equal liberty principle)이다.
- ④ 기회균등의 원리와 차등원리가 충돌할 때에는 기회균등의 원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2. 합리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이먼(H. Simon)은 인간 인지능력의 한계, 상황의 불확실성, 시간과 자원의 제한으로 의사결정이 제한된 합리성 하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 ② 디징(P. Diesing)은 합리성을 기술적, 경제적, 법적, 사회적, 정치적 합리성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 ③ 디징의 기술적 합리성은 주어진 목표를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
- ④ 사이먼은 만족모형에서 인간을 합리성의 제약을 받는 경제인(economic man)으로 가정하였다.

3. 신행정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신행정학의 이론적 토대는 신관리주의와 경제학에 있다.
- ② 마리니(F. Marini)는 신행정학의 관점으로 현실 적합성 지향, 탈실증주의, 고객지향적인 조직 등을 제시하였다.
- ③ 왈도(D. Waldo)는 신행정학의 관점을 규범이론, 사회적 타당성, 행동주의로 규정한 바 있다.
- ④ 일선 현장 관료들의 가치 중립적인 태도보다 가치 지향적인 태도를 옹호한다.

4. 현상학적 행정연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회현상을 사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상호주관적 경험으로 바라본다.
- ② 외면적 행태보다 내면적 의도가 결부된 의미 있는 행위를 중시한다.
- ③ 현상학적 ‘판단중지’를 통해 선입견을 배제할 것을 요구한다.
- ④ 객관화된 경험적 사실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실증주의 입장을 옹호한다.

5. 가외성(redundancy)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의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강조되는 행정가치이다.
- ② 가외성의 예로 권력분립, 분권화 등이 있다.
- ③ 신공공관리론(NPM)에서 중시되는 행정가치이다.
- ④ 가외성의 요소로 중복성, 중복성, 동등잠재력이 제시된다.

6. 넛지(nudge)이론을 활용한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행동적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개입을 급진적 점증주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 ② 행동경제학에 이론적 토대를 두고 있으며, 인간의 완전한 합리성을 가정한다.
- ③ 인간의 사고체계 중 시스템2는 시스템1과 달리 휴리스틱스(heuristics)에 의존하는 의사결정을 하며, 이로부터 행동적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 ④ 어떤 선택을 금지하거나 경제적 유인을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직접적인 방식의 정부개입이다.

7. 공공선택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오스트롬(V. Ostrom)은 관료행정과 대비되는 민주적 행정이론을 강조하며, 관료도 부패할 수 있으므로 권한이 분권화된 적합한 조직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 ㉡ 물러(D. Mueller)는 공공선택론을 비시장적 의사결정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로 규정한 바 있다.
- ㉢ 경제학적 분석도구를 국가이론, 관료행태 등의 연구에 적용한다.
- ㉣ 정부실패를 비판하며 극복방안을 제시하였고, 이에 못지않게 시장실패에 대한 주제도 심층적으로 탐구하였다.

- ① ㉠㉡
- ② ㉠㉢㉣
- ③ ㉡㉢㉣
- ④ ㉢㉣

8. 정책과정의 참여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식적 참여자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정책과정에 참여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참여자를 말한다.
- ② 정당은 예산심의 등을 통하여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등을 통하여 정책과정을 평가한다.
- ③ 비공식적 참여자로 이익집단, 시민사회단체, 언론매체 등을 들 수 있다.
- ④ 의회의 골격입법 확대는 정책과정에서 행정부의 재량권을 강화시킨다.

9. 정책과정의 권력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밀스(C. Mills)는 지위(제도적)접근법, 헌터(F. Hunter)는 명성 접근법을 통해 미국 사회의 엘리트이론을 탐구하였다.
- ② 달(R. Dahl)은 미국 뉴헤이븐시에 관한 연구를 통해 엘리트가 완전히 사라졌음을 발견하였다.
- ③ 바흐라흐와 바라츠(P. Bachrach & M. Baratz)는 무의사결정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 ④ 신다원주의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기업집단에 대한 특권이 실제 정책과정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10. 휴리스틱스(heuristics)와 판단 오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표성 휴리스틱스는 초기값으로부터 추정을 시작하여 조정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답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초기값의 편의와 조정의 불충분성으로 발생하는 판단 오류를 의미한다.
- ② 이용가능성 휴리스틱스는 어떤 사건의 빈도나 확률을 판단할 때, 실제 빈도가 아닌 구체적인 예를 떠올리는 것이 얼마나 용이한가에 따라 발생하는 판단 오류를 의미한다.
- ③ 사람들에게 ‘r’로 시작하는 영단어와 ‘r’이 세 번째 위치하는 영단어 중 어느 것이 더 많을지를 빠르게 판단하라고 하면 전자가 많을 것으로 판단하는 오류(실제로는 후자가 더 많음)는 이용가능성 휴리스틱스의 예이다.
- ④ 5초를 주고 A그룹에게는 ‘8×7×6×5×4×3×2×1’, B그룹에게는 ‘1×2×3×4×5×6×7×8’의 결과치를 추정하게 하면 A그룹이 답한 수치의 평균값(2,250)이 B그룹이 답한 수치의 평균값(512)보다 크게 나타나는 오류(실제로는 40,320으로 동일함)는 고착화와 조정 휴리스틱스의 예이다.

11. 점증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기존 정책을 토대로 약간 수정된 내용의 정책을 결정하는 방식의 모형이다.
- ② 정책과정을 진흙탕 헤쳐나가기(muddling through)로 묘사하기도 한다.
- ③ 린드블롬(C. Lindblom)은 점증주의가 현실의 정책을 설명하는 경험적 모형이지만, 합리모형을 추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 ④ 정책수단에 따라 정책목표가 수정될 수 있음을 긍정하였다.

12. 위기상황에서의 의사결정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위기상황에서의 시간 압박은 비공식적 의사결정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인다.
 - ② 위기상황에서 관료정치현상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으며, 정치적 긴장 상태가 강해질 수 있다.
 - ③ 위기 시 합리적이고 분석적인 결정을 하지 못하고, 병리적이고 비정상적인 결정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무의사결정, 즉흥적인 대응이 있다.
 - ④ 던(W. Dunn)이 처음으로 제안한 집단사고(groupthink)는 위기 상황에서 의사결정의 편향을 초래한다.

13. 정책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고전적 정책집행관은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이 분리되고 정책집행에서의 결정은 본질적으로 비정치적이라 보았다.
 - ② 현대적 정책집행관은 정책집행의 정치성과 순환성을 강조하며 과거의 위계적·단방향의 정책집행관을 탈피하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 ③ 프레스만과 윌다브스키(J. Pressman & A. Wildavsky)는 오클랜드시의 실업자 구제사업이 실패한 원인으로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장기간 근무하여 집행 동기가 상실되었음을 지적하였다.
 - ④ 하그로브(E. Hargrove)는 집행연구를 ‘잃어버린 고리(missing link)’로 표현하며 집행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14. 정책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정책변화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보다는 5년 정도의 중기기간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 ㉡ 정책과정과 정책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분석단위로 정책하위체제(policy subsystem)에 초점을 둔다.
- ㉢ 정책하위체제 내에서는 신념체계를 공유하는 복수의 정책옹호연합이 존재한다.
- ㉣ 정책변동의 원인으로 외부적 충격을 제시하며, 외부적 충격은 정책의제를 변경시킬 수 있으나 지배적인 옹호연합의 정책핵심 요소를 변화시킬 수는 없다고 보았다.

- ① ㉠㉡ ② ㉠㉢ ③ ㉡㉣ ④ ㉢㉣

15. 거시조직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동체생태학이론은 사회생태학에 근거하여 조직을 환경에 수동적으로 적응하는 존재로 본다.
 - ② 자원의존이론은 조직을 환경에 대한 자원의존을 줄이기 위해 환경 자체를 바꾸거나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능동적인 존재로 본다.
 - ③ 조직군생태학이론은 조직을 환경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수동적인 존재로 본다.
 - ④ 전략적 선택이론은 조직구조가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의 상황판단과 전략적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16. 청지기이론(stewardship theory)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청지기이론은 사회심리학을 바탕으로 스스로 주인의 이익에 부합하여 행동할 수 있다는 청지기상을 강조한다.
 - ② 인간모형으로 경제적 인간이 아닌 자아실현적 인간을 가정한다.
 - ③ 파이너(H. Finer)의 주장과 같이 객관적 책임과 외부통제를 강조한다.
 - ④ 구성원들의 전문성에 입각한 상호존중으로 인하여 이타적 가치가 생성된다고 본다.

17. 탈관료제적 조직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골렘뷔스키(R. Golembiewski)는 조직 내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일하면서 보람과 만족을 느끼는 압력이론(push theory)의 처방에 따라 조직의 구조와 과정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② 베니스(W. Bennis)는 문제중심 구조, 구조의 잠정성·유연성을 통한 환경변화에의 대응성을 구조설계의 처방으로 제시하였다.
 - ③ 커크허트(L. Kirkhart)는 조직 간의 자유로운 인력이동을 통한 상황적응성을 강조하는 연합적 이념형을 주장하였다.
 - ④ 테이어(F. Thayer)는 지배복종체제인 계서제의 완전한 타파를 강조하였다.

18. 강화이론(reinforcement theory)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스키너(B. Skinner)는 외부 자극에 대한 유기체의 능동적 반응을 통해 형성되는 조작적 조건화를 연구하였다.
- ㉡ 인간의 행동은 미래 자신의 행동 결과에 대한 예측을 통해 강화된다고 본다.
- ㉢ 처벌(punishment)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특히 이전에 보상을 받아 강화된 행동이지만 이제는 그 정도가 지나쳐 바람직하지 않게 된 행동의 빈도를 줄이고자 긍정적 보상을 제거하는 것이다.
- ㉣ 회피(avoidance)는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제거함으로써 바람직한 행동의 빈도를 늘리는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19. 켈리(R. Kelley)의 팔로워십(followership)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켈리는 ‘독립적·비판적인지, 의존적·무비판적인지’와 ‘수동적인지, 적극적인지’를 기준으로 추종자의 유형을 구분하였다.
 - ② 소외적 추종자(alienated follower)는 독립적·비판적이고 조직의 문제 해결에 수동적이다.
 - ③ 수동적 추종자(passive follower)는 의존적·무비판적이고 조직의 문제 해결에 수동적이다.
 - ④ 효과적 추종자(effective follower)는 의존적·무비판적이지만 조직의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다.

20. 협상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배분적 협상(distributive bargaining)은 파이를 나누는 제로섬(zero-sum) 협상이다.
 - ② 통합적 협상(integrative bargaining)은 서로의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얻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③ 배분적 협상의 예로 판매자의 실적 달성에 따른 인센티브제도를 들 수 있다.
 - ④ 통합적 협상은 당사자들에게 강한 유대감과 서로 승리했다는 느낌을 들게 하는 장기적인 인간관계에서 행해진다.

21. 공공봉사동기(public service motivation)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공봉사동기의 구성개념은 합리적 차원, 규범적 차원, 감성적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
 - ② 합리적 차원은 ‘공공정책에 대한 매력’으로, 공공정책의 전반적인 과정에 공직자들이 적극 참여하는 것이 자신들의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행위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 ③ 규범적 차원은 ‘공익에 대한 기여’로, 공익 실현을 위하여 공직자들이 어느 정도 노력하는가와 관련된 것이다.
 - ④ 공·사 부문 종사자들이 동일한 가치 및 욕구 체계를 갖고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22. 엽관주의(spoils system)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엽관주의적 인사제도는 정부 관료제의 민주화에 기여한다.
 - ② 집권정치인들이 공무원들의 높은 충성심을 확보할 수 있어 정치적 통제력을 강화한다.
 - ③ 정권 교체에 따른 공무원의 대량 교체를 막아주기 때문에 행정의 계속성·전문성 향상에 기여한다.
 - ④ 정부 관료제의 정치적 대응성을 높이고 민주정치의 기초가 되는 정당제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23. 다양성 관리(diversity management)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다양성 관리란 내적·외적 차이를 가진 다양한 노동력을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인 인적자원 관리과정이다.
 - ② 조직 내 구성원의 다양성이 높을수록 성격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 사고의 차이 등이 극복되기 쉬우므로 다양성 관리의 필요성은 사라진다.
 - ③ 표면적 차원의 다양성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조직 내 차별행위가 발생하면서 생산성의 저하, 첨예한 갈등 및 이직률 증대와 같은 부정적 결과를 유발하기 쉽다.
 - ④ 기존의 다양성 관리가 표면적 다양성을 중심으로 시행되어 왔다면, 최근에는 조직구성원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내면적 다양성도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다.
24. 경력경쟁채용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분야에 대해 채용하는 제도로써 관련 직위의 우수전문인력 및 유경력자를 선발하는 것이다.
 - ② 공개경쟁채용제도를 보완하고 필요한 인력의 확보를 용이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 ③ 공직임용의 기회균등 및 능력 중심의 실적제 원칙을 저해할 수 있다.
 - ④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반드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거쳐야 한다.
25. 교육훈련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교육훈련 방법은 장소에 따라 직장훈련(OJT: On-the-Job Training)과 직장외훈련(Off JT: Off-the-Job Training)으로 구분할 수 있다.
 - ② OJT의 경우 교육훈련이 실제적이고, 교육훈련을 하면서 일도 할 수 있으며, 낮은 비용으로 시행이 가능하고,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동시에 교육훈련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③ Off JT의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교육훈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들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④ OJT의 경우 교육훈련의 수준이나 내용 등에 편차가 발생할 수 있고, 자칫 일과 교육훈련 모두 소홀히 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26. 순환보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나라에서는 ‘I형 보직경로’ 때문에 잦은 순환보직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②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일반행정가 양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 ③ 잦은 순환보직은 정책에 대한 책임성과 효율성을 감소시켜 조직의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 ④ 공무원의 통합적인 시각을 증진시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27. 주식백지신탁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가 직위 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거나 주가에 영향을 미쳐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제도이다.
 - ② 「공직자윤리법」상 이 제도의 적용대상자는 재산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인과 그 이해관계자이다.
 - ③ 「공직자윤리법」 및 동법 시행령상 공개대상자등은 본인과 그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권한을 수탁기관에 위임하는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④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보유주식의 매각·신탁 의무가 없다.
28. 우리나라의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프로그램이란 동일한 정책목표 하에 추진되는 여러 개의 단위 사업을 하나로 묶은 것을 말한다.
 - ② 제도 도입 이후 종전의 예산과목 체계에서 ‘장-관-항’이 기능별 분류로, ‘세항-세세항-목’이 사업별 분류로 단순화되었다.
 - ③ 투입관리와 통제 중심의 재정운영을 통해 재정집행의 투명성과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다.
 - ④ 지방정부에서 시범적으로 도입된 이후 2008년에 중앙정부로 확대되었다.
29. 분산조달에 대비되는 집중조달의 일반적인 장점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구매업무의 전문화가 가능하다.
 - ② 부패나 부당거래에 대한 통제가 용이하다.
 - ③ 대량 공급이 가능한 공급업자에게 유리하다.
 - ④ 적시성 있는 구매가 가능하여 각 수요기관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
30. 중앙정부의 결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수입에서는 추정액과 실제 징수액이 다를 수 있지만, 지출에서는 예산과 결산이 항상 일치한다.
 - ② 국회의 의결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종료된다.
 - ③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지출이 지적되면 그 지출의 집행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해야 한다.
 - ④ 세계잉여금은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 또는 출연할 수 있다.
31. 우리나라 감사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모든 공공기관의 세입·세출 결산을 확인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 ② 국무총리 소속의 헌법상 기관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할 수 있다.
 - ③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할 수 없다.
 - ④ 전통적 회계감사에서는 지출의 경제성·능률성·효과성에 대한 검토를 중시하나, 성과감사에서는 지출의 합법성을 중시한다.

32.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재세대와 미래세대 간의 공평한 재정부담을 실현할 수 있다.
- ② 민간의 유희자금을 공공투자로 유도할 수 있다.
- ③ 시장경쟁에 익숙한 민간기업이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 경우 정부에 비해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건설이 가능하다.
- ④ BTL(Build-Transfer-Lease)에는 최소운영수입보장(minimum revenue guarantee) 제도가 적용된다.

33. 예산결정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서메이어와 월로비(K. Thurmaier & K. Willoughby)의 다중 합리성모형은 예산과정의 다양한 단계별 특성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실제 예산배분이 결정되는 것으로 본다.
- ② 총체주의(synopticism)는 해결할 문제나 달성할 목표가 명백히 주어져 있는 것을 가정한다.
- ③ 단절균형이론(punctuated equilibrium theory)은 사후적인 분석으로는 적절하지만, 단절적 균형이 발생할 수 있는 시점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 ④ 루빈(I. Rubin)의 실시간 예산운영(real-time budgeting)모형은 세출 흐름에서 책임성의 정치가 나타난다고 본다.

34. 예산의 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행정과목 간의 상호융통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이나 위임 없이도 가능하다.
 - ㉡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의 변동이 있을 때 예산의 책임소관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 예산 한정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 ㉣ 기획재정부장관이 전용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전용명세서를 그 중앙관서의 장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 ㉤ 예산 사전의결 원칙의 예외이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5. 우리나라 전자정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전자정부법」상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업무를 전자화하여 행정기관등의 상호 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말한다.
- ②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0년에 우리나라는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1위로 선정된 바 있다.
- ③ ‘민원24’ 서비스는 노무현 정부 시기에 구축되었다.
- ④ 문재인 정부는 ‘광화문1번가’라는 시민참여포털을 구축하여 정책 제안의 활성화를 추구하였다.

36. 빅데이터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모두 빅데이터에 포함된다.
- ② 전통적인 데이터 개념과 다른 빅데이터의 주요 특징은 크기(volume), 타당성(validity), 속도(velocity)이다.
- ③ 빅데이터의 특징 중 속도(velocity)란 데이터 처리를 실시간 또는 일정 주기에 맞춰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 ④ 빅데이터 활용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한 기초 자치단체가 존재한다.

37. 디지털플랫폼정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 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목표로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제시하고 있다.
- ② 효과적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서는 데이터기반행정과 증거기반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③ 현 정부는 ‘공동생산형 → 참여형 → 행정서비스형 → 행정정보화형’의 순서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발전 계획을 수립·추진 중에 있다.
- ④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디지털 격차, 개인정보침해 등 지능정보사회의 역기능에 대한 통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38.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평가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 간 상대적 재정규모를 평가하지 못한다.
- ② 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에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조정교부금을 합한 재원의 비중으로 정의된다.
- ③ 지방재정력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의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필요한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소요되는 재원을 자기 관할 구역 내의 과세대상으로부터 조달할 수 있는 조세부담 능력으로 정의된다.
- ④ 재정력지수는 보통교부세 배분 기준으로 활용된다.

39.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의 대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세율 감면에 관한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를 합치는 것에 관한 사항
- ③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항
- ④ 지방자치단체의 사용료 부과에 관한 사항

40. 특별지방행정기관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사무처리 또는 공동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 ② 주민의 요구에 대한 대응이 지방자치단체보다 둔감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지역문제에 대하여 전문성을 살려 복잡한 행정문제를 보다 효율적·광역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④ 이중행정, 이중감독의 문제 등 지방자치단체와 업무가 상충할 우려가 있다.

【경찰실무종합】

1. 경찰임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을 통해 경찰의 궁극적인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협방지로 도출할 수 있다.
- ㉡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협방지로 정의할 때, 공공의 안녕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를 포함하는 상위개념이다.
- ㉢ 구체적 위협이란 구체적 개별 사안에 있어 가까운 장래에 보호 법익에 대한 손해발생의 충분한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 추상적 위협이란 경찰의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을 할 때 실제로 위협의 가능성은 예측되나 실현이 불확실한 경우를 의미한다.

2. 경찰행정의 특수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고립성: 경찰에 대한 존경심의 결여, 법집행에 대한 협조의 부족, 경찰업무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시민들로부터 소외받게 되어 고립되는 특성을 갖는다.
- ㉡ 보수성: 경찰은 헌법을 수호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임무로 하기 때문에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현상유지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 ㉢ 조직성: 경찰은 사건·사고 발생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고 기동성과 협동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안정되고 능률적으로 조직되어야 하며, 계급체계를 갖추고 제복을 착용한다.
- ㉣ 권력성: 경찰은 질서유지를 위해 법에 근거하여 일반인에게 일정한 사항을 지시·명령함으로써 시민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 경찰의 기본이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경찰조직에서 중앙경찰과 자치경찰 사이의 적절한 권한 분배, 경찰관의 민주적 리더십 함양을 통한 민주주의 의식 확립은 대내적 민주화 방안에 해당한다.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등을 통한 경찰활동의 공개는 대외적 민주화 방안에 해당한다.
-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목적)는 경찰의 기본이념 중 정치적 중립주의의 법적 근거에 해당한다.
-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는 경찰의 기본이념 중 경영주의의 법적 근거에 해당한다.

4.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구국경찰활동에 해당되는 전투는 무엇인가?

- ㉠ 미 해병 1사단에 배속된 한국경찰 ‘화랑부대’ 1개 소대(기관총부대)가 뛰어난 전공을 거둬으로써 미 해병의 극찬을 받았다.
- ㉡ ‘화랑부대’는 미군으로부터 별도 정예훈련을 받고 부대단위로 편제된 경찰관 부대를 통칭하였다.
- ㉢ 미군으로부터 인정받은 전투력을 바탕으로 수색·정찰임무 및 전투를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 ① 장진호전투
② 다부동전투
③ 춘천내평전투
④ 함안전투

5. 다음 중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은 모두 몇 개인가?

- ㉠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6. 「경찰공무원 임용령」상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시보 임용경찰공무원을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는 사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제21조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교 처분을 받은 경우
- ㉢ 제21조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한 경우
-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른 제2 평정요소인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포상의 평정점이 만점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7.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상 징계의 감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징계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의무위반행위가 다른 법령에 의해 처벌사유가 되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없는 때에는 징계책임을 감경하여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하거나 징계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
- ㉡ 징계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감독자가 부하직원의 의무위반행위를 사전에 발견하여 적법 타당하게 조치한 때에는 징계책임을 감경하여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하거나 징계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
- ㉢ 징계위원회는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다만, 경정이하의 경찰공무원등은 경찰청장 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 ㉣ 징계위원회는 「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8.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경찰관은 14세미만의 사람 또는 임신부에 대하여 전자충격기 또는 전자방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 경찰관은 최루탄발사기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 15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한다.
- ㉢ 직무수행 중 위해성 경찰장비를 사용하는 경찰관은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을 위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 ㉣ 가스발사총을 사용할 경우 경찰관은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이를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9.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결산 절차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 감사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제출된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한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 ④ ㉣ → ㉡ → ㉢ → ㉠

10.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I급비밀은 반드시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혼합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의 작성·분류·취급·유통 및 이관 등의 모든 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③ 비밀의 보관용기 외부에는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해서는 아니된다.
- ④ 보호지역은 그 중요도에 따라 제한지역,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으로 나눈다.

1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는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정정보도 청구는 언론사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서에는 피해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를 적고,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등의 내용 및 정정을 청구하는 이유와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계속 보도 중이거나 매개 중인 경우에는 그 내용의 정정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 ③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경우에 언론사등은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 ④ 언론사등이 하는 정정보도에는 원래의 보도 내용을 정정하는 사실적 진술, 그 진술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제목과 이를 충분히 전달하는 데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 위법한 내용을 포함한다.

12. 경찰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는 사전통제에 해당한다.
- ② 대통령의 경찰청장 및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임명권은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 ③ 국회의 국정감사·조사권은 사전통제인 동시에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 ④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사후통제인 동시에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13. 경찰활동에서 인권존중주의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도경찰청 소속의 수사심의계는 수사심의신청 사건 내용이 수사 절차에서의 청렴 의무위반·인권침해·부정청탁 등 「경찰 감찰 규칙」 제2조 제1호의 의무위반행위와 관련된 사항인 경우 경찰관서 감찰부서에 이송해야 한다.
- ③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에 따라 인권침해, 편파수사를 이유로 다수의 진정을 받는 등 공정한 수사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 수사경과자의 수사경과를 해제해야 한다.
- ④ 「경찰 인권보호 규칙」에 따라 경찰청장은 경찰관등이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3년 단위로 인권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14. 「경찰 감찰 규칙」상 감찰처분심의회의 심의 사항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감찰관 제척·회피 및 기피 신청과 관련한 사항
- ② 감찰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와 관련한 사항
- ③ 감찰결과의 공개와 관련한 사항
- ④ 감찰결과 처리 및 양정과 관련한 사항

15. 「경찰 인권보호 규칙」상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인권과 관련되는 경찰의 제도·정책·관행의 개선을 명령할 수 있다.
- ②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위촉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③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으로 정기회의에 3회 불참 등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④ 경찰 활동 전반에 걸친 민주적 통제를 구현하여 경찰력 오·남용을 예방하고, 경찰 행정의 인권지향성을 높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 활동을 정립하기 위해 경찰청장 및 시·도경찰청장의 자문기구로서 각각 경찰청 인권위원회,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1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정보공개의 청구권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으로 한정한다.
- ③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

17. 다음에서 설명하는 경찰 전문직업화의 단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전문가가 우월적 지식에 근거하여, 비전문가의 판단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으로 그것을 대신하려는 윤리적 문제점이다. 예컨대, 경찰관이 신고자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형사법 지식만을 고려하며 신고된 사건의 해결방법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경우이다.

- ① 소외
- ② 부권주의
- ③ 차별
- ④ 사적인 이익을 위한 이용

18. 경찰부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Dirty Harry 문제는 남의 비행에 대하여 일일이 참견하여 도덕적으로 충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② 펠드버그(Feldberg)는 경찰관이 지역주민으로부터 작은 호의를 받는다고 해서 큰 부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 ③ 델라트르(Delattre)는 경찰관이 지역주민으로부터 작은 호의를 받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④ 사회 형성재 이론은 주민의 작은 호의를 통하여 경찰관이 지역 주민들과 친해질 수 있다고 본다.

19. 다음은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상 “면책”에 관한 정의이다. 밑줄 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2조(정의)
2. “면책”이란,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비효율, 손실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책임을 묻지 않거나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 ① ‘징계 또는 문책 요구’가 포함된다.
- ② ‘시정 요구’가 포함된다.
- ③ ‘경고·주의 요구’가 포함된다.
- ④ ‘개선 요구’가 포함된다.

20. 다음에서 설명하는 모델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에크와 스펠만(Eck & Spelman)은 경찰관서에서 보다 쉽게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Problem Oriented Policing: POP)을 지역문제의 해결에 적용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과정 모델을 제시하였다.

- ① 쓰레기통 모델
- ② SARA 모델
- ③ 사이버네틱스 모델
- ④ 점증 모델

21.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상 출동 현장의 촬영·관리 및 관련 기록·보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경찰청장등은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출동 현장의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지휘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찰관이 영상 촬영장치를 착용 또는 휴대하도록 하여 출동 현장을 촬영할 수 있다.
- ㉡ 출동 현장을 촬영할 때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안내서면, 안내방송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출동 현장에 있는 사람이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 ㉢ 경찰청장등은 출동 현장 촬영 사실을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찰청 홈페이지에 촬영 사실을 사후 공지하는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 ㉣ 출동 현장을 촬영하여 수집된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촬영일 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범죄 수사를 위해 영상정보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 등 경찰청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① ㉠㉡
- ② ㉠㉢
- ③ ㉡㉣
- ④ ㉢㉣

2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상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 ① 20세 미만인 사람(다만, 대한체육회장이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체육회장이 추천한 선수 또는 후보자가 사격경기용 총을 소지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으로 인하여 총포의 안전한 사용을 확신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

-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④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등록대상자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 또는 공개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 정보,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등록대상자에 대한 기본신상정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할 때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등록대상자에 대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경력자료를 함께 송달하여야 한다.
- ④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2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긴급응급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긴급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검사의 청구에 대하여 사후승인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 ④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응급조치가 있는 후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 주거등을 옮긴 경우에는 사법 경찰관에게 긴급응급조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25.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및 「경찰수사규칙」상 불송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동일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또는 검사의 불기소가 있었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다시 수사해도 동일하게 결정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불송치(각하) 결정한다.
- ㉡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관하여 각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혐의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
- ㉢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보완수사를 이행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송치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 ㉣ 사법경찰관은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의자가 불송치 결정에 관한 사실증명을 청구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불송치 결정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 ① ㉠㉡
- ② ㉠㉢
- ③ ㉡㉣
- ④ ㉢㉣

26. 「경찰수사규칙」 및 「범죄수사규칙」상 압수물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를 받을 사람이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송치 결정을 하기 전에 압수물 처분을 완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한 경우에는 피해자 및 소유자등으로부터 압수물 환부·가환부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 ③ 압수물 폐기는 재생이 불가능한 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압수물 폐기 조서를 작성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 ④ 경찰관은 압수금품 중 현금, 귀금속 등 중요금품과 유치인으로 부터 제출받은 임치 금품은 별도로 지정된 보관담당자로 하여금 견고한 상자 또는 보관에 적합한 창고에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27. 「경찰수사규칙」 및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상 입건 전 조사 및 불입건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사법경찰관이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사에 착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건 수리를 요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사법경찰관이 근무하는 경찰관서의 소속 수사부서의 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 ㉡ 조사는 임의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물적 강제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남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 수사부서의 장은 조사에 착수한 후 6개월 이내(「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조정 규정」 제2조 제5호 본문의 죄와 관련된 사건은 12개월 이내)에 수사절차로 전환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 ㉣ 사법경찰관은 통지로 인해 보복범죄 또는 2차 피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불입건 결정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28. 「범죄수사규칙」상 기피 및 회피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소속 수사부서장은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사건 담당 경찰관을 재지정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② 소속 수사부서장이 기피 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때에는 감사부서의 장은 기피 신청 접수일부 7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내에 공정수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기피 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7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위원회 개최를 연기할 수 있다.
- ③ 기피 신청을 하려는 피의자, 피해자와 그 변호인은 기피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피 신청 대상 경찰관이 근무하는 경찰관서 내 소속 수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사건 담당 경찰관이 회피 신청을 하고 소속 경찰관서장이 그 회피 신청을 허가한 때에는 회피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건 담당 경찰관을 재지정하여야 한다.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9세미만피해자등 진술 내용 등의 영상녹화 및 보존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법경찰관은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하고, 그 영상 녹화물을 보존하여야 한다.
- ②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 ③ 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변호사 앞에서 봉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 ④ 사법경찰관은 피해자가 녹화장소에 도착한 시각, 녹화를 시작 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녹화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서 또는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30.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상 신변안전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검사는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신변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은 재판장·검사 또는 주거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은 신변안전조치의 요청 또는 신청을 구두 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구두 또는 유선으로 신변안전조치를 요청 또는 신청한 때에는 사후에 관련 서면 제출을 요하지 않는다.
- ④ 재판장 또는 판사는 공판정에 출석한 검사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취하도록 구두로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취지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31. 다음에서 설명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약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알약의 모양이 나비모양처럼 생겼다고 하여, 일명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마약성 식욕억제제의 성분이다.
- ㉡ 중추신경을 흥분시켜서 식욕을 사라지게 하여 체중감량의 효과가 있다.
- ㉢ 다량을 복용하거나 장기 복용하면 환청, 환각, 망상, 중독 등의 부작용이 있다.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 ① 옥시코돈(Oxycodone)
② 코데인(Codeine)
③ 펜터민(Phentermine)
④ 해시시(Hashish)

32.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상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피해자 등 피해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사건을 접수한 경찰관은 담당 부서의 피해자 보호관 등에게 인계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 ② 경찰관은 피해사실을 접수한 때에 한하여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피해자지원제도 및 유관 기관·단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계하도록 노력한다.
- ③ 경찰관은 조사 시작 전 피해자에게 가족 등 피해자와 신뢰 관계에 있는 자를 참여시킬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④ 경찰관은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심각한 불안감을 느끼는 등 피의자와의 대질조사를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피의자와 분리하여 조사하는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3. 다음에서 설명하는 다중범죄의 정책적 해결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특정 불만집단에 대한 정보활동 강화로 사전에 불만·분쟁 요인을 찾아 해소시키는 방법이다.

- ① 선수승화법
② 경쟁행위법
③ 지연정화법
④ 전이법

34.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상 경찰봉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찰관은 ‘소극적 저항’ 이상인 상태의 대상자에게 경찰봉을 대상자의 신체에 안전하게 밀착한 상태로 밀거나 끌어당길 수 있다.
 - ② 경찰관은 ‘폭력적 저항’ 이상인 상태의 대상자의 신체를 경찰봉으로 찌르거나 가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급적 대상자의 머리, 얼굴, 목, 흉부, 복부 등 신체 중요 부위를 피하여야 한다.
 - ③ 현행법,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대상자가 도주하는 경우 경찰관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경찰봉으로 대상자의 신체 중요 부위 또는 급소 부위를 찌르거나 가격할 수 있다.
 - ④ 경찰관이 ‘중위험 물리력’ 이상의 경찰봉을 사용한 경우 신속히 사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5.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비상근무의 발령권자가 비상근무에서 면제할 수 있는 경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다만, 부부공무원인 경우 1명으로 한정한다)
 - ② 임신부로 그 해의 을지연습 또는 을지연습 간 공무원비상소집 훈련의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③ 정년 퇴직일 기준 잔여 근무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
 - ④ 건강상태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비상근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비상근무의 발령권자가 인정하는 사람
36.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의 운전면허 취소·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시·도경찰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등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등록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 ③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등록한 후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자동차등의 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상 작동 여부를 검사받지 아니한 경우
 - ④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해체·조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해당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다만,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점검 또는 정비를 위한 경우, 폐차하는 경우,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부착 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제외한다)
37.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규칙상 65세 이상 운전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도로교통법」 제73조 제3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교육을 받으려는 날에 65세 이상인 사람이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권장교육을 받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한정한다.
 - ② 「도로교통법」 제73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의3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실태’는 7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제8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의 교육과목 및 내용에 해당한다.
 - ③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75세 이상인 사람의 최초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제8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 ④ 「도로교통법」 제87조 제2항에 따라,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은 제87조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38. 정보보고서에서 판단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것부터 높은 순서로 바르게 배열된 것은?
- ① 우려 → 전망 → 예상 → 판단
 - ② 우려 → 예상 → 전망 → 판단
 - ③ 판단 → 예상 → 전망 → 우려
 - ④ 예상 → 판단 → 전망 → 우려
39. 안보경찰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일반경찰의 경우 1차적 목표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안보경찰은 1차적 목표가 국가의 안전보장에 있다.
 - ② 안보경찰활동은 사후·진압적 성격을 갖는다.
 - ③ 안보경찰활동의 기본적인 법적 근거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 ④ 안보경찰의 수단상 특징은 비공개성과 비노출성이다.
40. 「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출국금지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 법무부장관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 ③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거나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 ④ 법무부장관은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블로그’, ‘미니 홈페이지’, ‘카페’ 등 사적(私的) 인터넷 게시 공간의 운영자가 게시공간에 게시된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데도 삭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 경우를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소지’행위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 ㉡ 의사가 환자와 대면하지 아니하고 전화나 화상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용태를 스스로 듣고 판단하여 처방전 등을 발급한 행위를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의 ‘진찰한 의사’가 아닌 자가 처방전 등을 발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 ㉢ 甲이 약 20일 동안 6회에 걸쳐 피해자 A의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옆집에 사는 A의 주거지 출입문에 끼워 넣어 A에게 전달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행위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① ㉠㉡ ② ㉠㉢ ③ ㉡㉣ ④ ㉢㉣

2. 범죄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문서의 사용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추상적 위험범이다.
- ② 중손괴죄는 구체적 위험범으로서 법익침해의 구체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이다.
- ③ 강제추행죄는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하는 자수범이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 범할 수 없다.
- ④ 공무집행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 아니한다.

3.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 ② 인터넷 포털 사이트 내 오락채널 총괄팀장 甲과 동 오락채널 내 만화사업의 운영 직원 乙에게 만화콘텐츠를 관리·감독할 권한과 능력이 있었고, 음란만화가 지속적으로 게재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甲과 乙은 콘텐츠제공업체들이 게재하는 음란만화의 삭제를 요구할 조리상의 의무가 있다.
- ③ 연구책임자가 처음부터 소속 학생연구원들에게 연구비를 개별적으로 지급할 의사 없이 공동관리계좌를 관리하면서 사실상 그 처분권을 가질 의도하여 이를 숨기고 산학협력단에 연구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았다면 이는 산학협력단에 대한 관계에 있어 기망에 의한 편취행위에 해당한다.
- ④ 아파트 전매인이 전매할 때 아파트 분양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분양업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내용이 매수인의 위 아파트 소유권취득에 영향을 미치는 사법상 효력에 관계있는 것이 아니더라도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

4.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소사(燒死)하게 한 경우 강도살인죄만 성립하고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② 「형법」상 해상강도치사상죄(제340조 제2항 및 제3항),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제177조 제2항), 강도치사상죄(제337조 및 제338조), 인질치사상죄(제324조의3 및 제324조의4)는 모두 미수범을 처벌한다.
- ③ 甲이 A를 강제로 차에 태워 A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당초 목적지가 아닌 다른 장소를 향하여 시속 약 60km 내지 70km의 속도로 진행하여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자, A가 감금상태를 벗어날 목적으로 차량을 빠져나오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고 사망한 경우 감금치사죄가 성립한다.
- ④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약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이는 강간치사죄나 강제추행치사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5. 인과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사용하던 가스설비의 휴즈코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를 간 후 가스공급을 개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주밸브가 열려져 가스가 유입되어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과실과 가스폭발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된다.
- ② 차를 도로에 주차한 점이나 차의 미등 및 차폭등을 켜 놓지 않은 것이 가령 도로교통법 위반의 잘못이 있더라도 그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위 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사고가 일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 사고와 위 차의 주차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③ 조정에 따른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피고가 조정성립 이후 청구원인에 관한 주된 조정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신의칙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조정성립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쉽사리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
- ④ 운전자 甲이 차를 세워 시동을 끄고 1단 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시동열쇠를 끼워 놓은 채 11세인 A를 조수석에 남겨 두고 차에서 내렸는데 A가 시동열쇠를 돌리며 악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아 차량이 진행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甲의 행위와 차량사고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6. 고의의 인식대상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축락·승낙살인죄에 있어서 축락 또는 승낙이 있다는 사실
- ② 사전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사실
- ③ 특수폭행죄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는 사실
- ④ 절도죄에 있어서 재물의 타인성

7. 사실의 착오에 관한 사례 중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이 다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甲이 A를 살해하고자 마음 먹고 몽둥이를 집어 들어 A를 향하여 가격하였으나 빗나가 A의 등에 엮힌 B가 두개골절 및 뇌좌상으로 사망하였다.
- ㉡ 甲이 A를 살해하고자 A의 물잔에 독을 탔으나 A의 개가 이 물을 마시고 죽었다.
- ㉢ 甲이 절취의 의사로 A의 지갑을 훔쳤으나 알고 보니 B의 지갑이었다.
- ㉣ 甲이 A를 상해할 의사로 돌을 A에게 던졌으나 이를 말리던 A의 동생 B가 그 돌에 맞아 상해를 입었다.

① ㉠㉡ ② ㉠㉢ ③ ㉡㉣ ④ ㉢㉣

8.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피해자 A가 B로부터 매수한 토지의 경계부분에 매수 전 자신이 식재하였던 수목을 전기톱으로 절단한 경우 甲이 수목을 식재할 당시 토지의 전 소유자 B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을 얻었더라도 특수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 ② 甲이 접근금지, 문언송신금지 등을 명한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안에서,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주거지 접근이나 문자메시지 송신을 피해자가 양해 내지 승낙했더라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 ③ 건물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甲과 그것을 점유관리하고 있는 A 사이에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甲이 위 건물에 침입하는 것에 대한 A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거나 甲의 범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 ④ 甲은 A의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당시 A의 모(母) B에게서 인테리어 공사 승낙을 받았는데, 이후 B가 임대차보증금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甲이 도끼를 집어 던져 상가 유리창을 손괴한 사안에서, B가 위 의사표시로써 시설물 철거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甲의 위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9. 정당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정당행위에 있어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하나로 참작하여야 하고 이를 독립적인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 ② ‘동물권’을 주장해 온 피고인들이 A 회사가 농장으로부터 생닭을 공급받아 도계하는 영업을 계속한다는 이유로 A 회사의 공장 정문 앞 도로에서 차량 진행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A 회사의 생닭 운송 및 도계 업무를 방해한 경우,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사회상규에 기한 정당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균형”은 결과적 측면이 아니라 행위의 동기 또는 목적의 정당성 측면에서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다.
- ④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10.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하여 범죄행위와 책임능력의 동시존재 원칙을 지키려는 견해는 실행의 착수시기를 원인설정 행위에서 찾는다.
- ②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별성을 원인설정행위와 실행 행위의 불가분적 연관에서 찾는 견해에 의하면, 간접정범과 유사한 구조로 이해하는 견해보다 실행의 착수시기가 늦어진다.
- ③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간접정범과 유사한 구조로 파악하는 견해는 구성요건의 정형성을 중시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보장적 기능을 관철하는데 부합하는 이론이다.
- ④ 「형법」 제10조 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 까지도 포함한다.

11.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정당방위 상황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가 그 상황이 존재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방위행위를 한 경우 이를 법률의 착오로 보고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된다고 보는 견해는 엄격 책임설이다.
- ② 甲이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 온 손님인 A를 강도로 오인하고 방어할 의사로 A를 폭행하였는데 강도로 오인한 과실이 회피 가능한 경우 법효과제한책임설에 따르면 甲은 처벌되지 아니한다.
- ③ 甲이 A와 B가 장난치는 것을 보고 A가 일방적으로 B를 강제 추행하는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B를 돕고자 A를 때려 상해를 입힌 경우 엄격책임설은 甲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책임이 부정되어 상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 ④ 법효과제한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에 빠진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교사자를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12. 실행의 착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유사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실제로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을 때 인정되는 것이지 간음행위까지 착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甲이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하여 육안 또는 캠코더의 줌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탐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촬영을 포기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③ 허위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한 경우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甲이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 밑 공간 사이로 집어넣는 등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13. 중지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A에게 위조한 예금통장 사본 등을 보여주면서 외국회사에서 투자금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자금 대여를 요청하였으나, A와 함께 그 입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가던 중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은행 입구에서 차용을 포기하고 돌아간 행위는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
- ② 甲이 乙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텐트 안으로 끌고 간 후 甲은 텐트 밖으로 나와 주변에서 망을 보고 乙은 피해자를 강간한 후, 이어서 甲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을 하며 강간을 하지 말아 달라고 사정을 하여 강간을 하지 않은 경우 乙이 甲과의 공모하에 강간행위에 나아간 이상 甲의 행위는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방화 후 불길에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경우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 ④ 甲과 乙이 A가 경영하는 사무실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甲은 그 부근 포장마차에 있고 乙은 사무실의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물색하고 있는 동안 甲이 자신의 범행전력 등을 생각하여 가책을 느낀 나머지 A에게 乙의 침입 사실을 알려 A와 함께 乙을 체포하였다면 甲의 행위는 중지미수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인정된다.

14. 가담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은 범죄구성요건을 실현하는 데에 어떤 형태로든 기여한 자 모두를 정범으로 인정하는 단일정범체계를 취한다.
- ② 가담자들이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의사방향이 일치된 형태로 범죄를 실현하도록 되어 있는 범죄구성요건인 집단범의 경우 각 가담자에 대하여는 가담 정도와 상관없이 동일한 범정형이 부과된다.
- ③ 필요적 공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를 공동으로 할 뿐만 아니라 관여자 모두의 행위가 범죄로 성립되어야 한다.
- ④ 대항범에 대하여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나, 이러한 법리가 구성요건상으로는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단지 구성요건이 대항범의 형태로 실행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5. 공동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그 공모자 중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도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그 이탈의 표시는 명시적일 것을 요한다.
- ㉡ 교량이 그 수명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건설업자의 완벽한 시공, 감독공무원들의 철저한 제작시공상의 감독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철저한 유지·관리라는 조건이 합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각 단계에 관여한 자는 자신의 과실이 교량붕괴의 원인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붕괴에 대한 공동책임을 면할 수 없다.
- ㉢ 상해죄에 있어서의 동시범은 두 사람 이상이 가해행위를 하여 상해의 결과를 가져올 경우에 그 상해가 어느 사람의 가해행위로 인한 것인지가 분명치 않다면 가해자 모두를 공동정범으로 본다는 것이므로 가해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치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동시범으로 다스릴 수 없다.
- ㉣ 연속된 제조행위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중전의 범행을 알았다면, 제조행위 전체가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되는 이상 그 가담 이전의 제조행위에 대하여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 ㉤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면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 ① ㉠㉡ ② ㉡㉢ ③ ㉢㉤ ④ ㉣㉤

16. 공범의 종속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 방조범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 방조범이 성립함에는 먼저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요건이 되는 것은 공범의 종속성에 연유하는 당연한 귀결이다.
- ②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실행의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정범이 그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성립한다.
- ③ 공범종속성설에 따르면, 「형법」상 효과 없는 교사(제31조 제2항)와 실패한 교사(제31조 제3항)는 공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것으로 당연 규정이라 이해한다.
- ④ 종속의 정도에 대한 극단종속형식에 따르면, 14세 미만자를 부추겨 교회에 있는 시계를 절취해 오도록 한 자는 절도죄의 공범이 아니라 간접정범이 될 수 있을 뿐이다.

17. 공범과 신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 제152조 제2항의 ‘모해할 목적’은 「형법」 제33조 단서 소정의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
- ② 업무상배임죄는 단순배임죄에 대한 가중규정으로 신분관계로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로 그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그러한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면,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신분범인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 ③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에는 「형법」 제31조 제1항이 「형법」 제33조 단서에 우선하여 적용됨으로써 신분이 있는 교사범은 신분이 없는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된다.
- ④ 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간접정범이 성립되고 이와 공모한 자 역시 그 간접정범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18. 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양 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외에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1개의 운전행위로 인한 것으로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관해서는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하여 다음 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라도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 ㉣ 같은 날 무면허운전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한 경우 그 범의의 단일성 내지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 방법 등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각 무면허운전 범행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19. 경합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경합범으로 처단할 시 가장 중한 죄 아닌 죄에 정한 형의 단기가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단기보다 중한 경우에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그 중한 단기를 하한으로 한다고 새겨야 한다.
- ②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규정의 “판결확정전”의 의미는 판결이 상소 등 통상의 불복방법에 의하여 다룰 수 없게 된 상태가 되기 전을 말한다.
- ③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별개의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확정 전에 범하여 졌다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후행범죄와 재심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경합범 관계가 성립한다.
- ④ 동일한 피고인에 대한 수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먼저 공소가 제기되고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별도로 공소가 제기됨으로써 이를 심리한 각 제1심법원이 공소제기된 사건별로 별개의 형을 선고하였는데, 이 중 어느 한 사건이 항소심법원에 계속되는 동안에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다른 사건의 판결이 별개의 절차에서 확정되었다면, 항소심법원은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20. 몰수·추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체포될 당시에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자기앞 수표나 현금 등은 장차 실행하려고 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범행에 제공하려는 물건이므로 몰수할 수 있다.
- ② 피고인이 범죄행위에 이용한 웹사이트 매각을 통해 취득한 대가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48조 제2항이 규정한 추징의 대상에 해당한다.
- ③ 「형법」 제247조의 도박장소등개설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자가 도박에 직접 참가하여 얻은 수익은 도박공간개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에 포함되므로 도박공간개설로 얻은 범죄 수익으로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다.
- ④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한 행위 자체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휴대전화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 촬영되어 저장된 동영상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기록으로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물건’에 각각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법원이 휴대전화를 몰수하지 않고 동영상만을 몰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21. 살인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임신성 당뇨병 및 이미 두 번의 제왕절개 출산 경험이 있는 37세의 고령인데다가 분만예정일을 14일이나 넘겨 태아가 5.2kg 까지 성장한 상태에서 조산원에 입원한 임부의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자연분만이 부적절하므로 조산원에 입원한 시점을 분만의 시기로 보아야 한다.
- ② 「형법」 제255조의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
- ③ 피고인이 7세 남짓된 어린자식에 대하여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하여 결국 익사하게 하였다면 비록 피해자를 물속에 직접 밀어서 빠뜨리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복종하는 어린 자식을 권유하여 익사하게 한 이상 살인죄가 성립한다.
- ④ 사람을 살해한 자가 그 살해의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사후 사체의 발견이 불가능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려는 의사로 인적이 드문 장소로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실신한 피해자를 끌고가서 그곳에서 살해하고 사체를 그대로 둔채 도주한 경우에는 비록 결과적으로 사체의 발견이 현저하게 곤란을 받게 되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별도로 사체은닉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22. 상해와 폭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상대방의 시비를 만류하면서 조용히 얘기나 하자며 그의 팔을 2, 3회 끌은 사실만 가지고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이라고 볼 수 없어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특수상해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그 물건을 곧바로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물건을 현실적으로 손에 쥐고 있는 등 피고인과 그 물건이 물리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 ㉢ 피고인의 구타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배란다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케 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

- ㉣ 피해자의 음모의 모근 부분을 남기고 모간 부분만을 일부 잘라냄으로써 음모의 전체적인 외관에 변형만이 생겼다면,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야기하는 등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는 폭행이 아니라 상해에 해당한다.
- ㉤ 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부딪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는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한다.

① ㉠㉡ ② ㉡㉢ ③ ㉡㉣ ④ ㉢㉤

23.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270조 제1항의 업무상동의낙태죄로 처벌한다.
- ②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은 「형법」 제270조 제2항의 부동의낙태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③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여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경우에는 「형법」 제271조 제1항의 단순유기죄보다 감경된 형으로 처벌해야 한다.
- ④ 「형법」 제27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학대’라 함은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24. 체포와 감금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정신병자도 감금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어내리려고 해서 피해자가 이를 뿌리쳤는데도 피고인이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을 손으로 막으며 엘리베이터로 들어오려고 하자 피해자가 버튼을 누르고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낸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통해 일시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신체를 구속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체포행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 ③ 감금죄의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 ④ 수용시설에 수용 중인 부랑인들의 야간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취침시간 중 출입문을 안에서 시정조치한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25. 강요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차량을 피해자 주택 대문 앞에 주차하였을 뿐 주차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물리적 접촉이나 어떠한 유형력의 행사도 없었다고 해도 주택 외부에 있던 피해자 차량을 주택 내부의 주차장에 출입시키지 못하는 불편이 발생하였다면, 피해자가 차량을 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해도 피고인의 행위는 강요죄를 구성한다.
- ② 직장 상사가 범죄행위를 저지른 부하직원에게 사직을 단순히 권유한 것만으로는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상대방에게 공무원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제3자를 위하여 재산적 이익 또는 일체의 유·무형의 이익 등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상대방은 공무원의 지위에 따른 직무에 관하여 어떠한 이익을 기대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서 요구에 응하였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의 요구행위는 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강요죄를 구성하기는 어렵다.
- ④ 환경단체 소속 회원들이 축산 농가들의 폐수 배출 단속활동을 벌이면서 폐수 배출현장을 사진촬영하거나 지적하는 한편 폐수 배출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서명하지 아니할 경우 법에 저촉된다고 겁을 주는 등 행한 일련의 행위가 ‘협박’에 의한 강요죄에 해당한다.

26.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② 아파트 놀이터의 의자에 앉아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 성기를 드러내고 피해자의 머리카락 및 옷 위에 소변을 본 경우 행위 당시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 ③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강간죄 등은 사람의 주거 등을 침입한 자가 피해자를 간음, 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주거침입죄를 범한 후에 사람을 강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하는 일종의 신분범이고, 선후가 바뀌어 강간죄 등을 범한 자가 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강간죄 등과 주거침입죄 등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 ④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7.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동장인 피고인이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전화를 걸어 ‘당산제(마을제사) 행사에 남편과 이혼한 A도 참석을 하여, 안 좋게 평가하는 말이 많았다.’는 취지로 말하고, 동 주민들과 함께한 저녁식사 모임에서 ‘A는 이혼했다는 사람이 왜 당산제에 왔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A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A의 당산제 참여에 관한 의견표현에 지나지 않아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② 회의 자리에서 상급자로부터 책임을 추궁당하며 질문을 받게 되자 이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듯한 사실을 발설하게 된 것이라면 그 발설 내용과 경위·동기 및 상황 등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질문에 대하여 단순한 확인 취지의 답변을 소극적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명예훼손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 ③ 사실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라도 다른 일반인과의 공동생활에 관계된 사항이라면 공익성을 지닌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개인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인 관심을 획득한 경우라면 직접적으로 국가·사회 일반의 이익이나 특정한 사회집단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다.
- ④ 사업소 소장인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A가 관리하는 다른 사업소의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의 SNS 메시지를 발송하면서 ‘A는 정말 야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라고 표현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을 넘어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에 해당하여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28. 절도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절도죄 성립을 위해서는 주관적 범죄구성요건으로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필요하고 이러한 요건은 「형법」 제329조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 ② A가 드라이버를 구매하기 위해 특정 매장에 방문하였다가 지갑을 떨어뜨렸는데, 10분쯤 후 甲이 같은 매장에서 우산을 구매하고 계산을 마친 뒤, 지갑을 발견하여 습득한 매장 주인 B로부터 “이 지갑이 선생님 지갑이 맞느냐?”라는 질문을 받아 “네 것이 맞다.”라고 대답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지고 갔다면 이러한 甲의 행위는 절취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③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④ 상습절도죄의 가중처벌 규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규정 취지는 같은 항 각호에서 정한 죄 가운데 동일한 호에서 정한 죄를 3회 이상 반복 범행하고, 다시 그 반복 범행한 죄와 동일한 호에서 정한 죄를 범하여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호에서 정한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중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부분에서 ‘이들 죄’는 앞의 범행과 동일한 범죄임을 요한다.

29. 사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침해행정 영역에서 일반 국민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권력 작용에 의한 재산권 제한을 면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의 직접적인 권력작용을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 ② 甲이 사건의 각 가처분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적이 없음에도 이 사건 각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면서 소송비용액계산서의 비용항목에 사실과 다르게 변호사비용을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소명자료 등을 조작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다면 甲의 이 사건 각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 객관적으로 법원을 기망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③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만,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라면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다.
- ④ 소송사기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지만 이러한 위형성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소송절차를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민사조정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30. 횡령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건물의 임차인인 甲이 임대인 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A에게 양도하면서 B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고 B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甲에게는 A를 위하여 위 채권의 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신임관계가 존재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
- ②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는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서뿐만 아니라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고 이러한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 ③ 횡령죄로 취득한 돈을 공범자끼리 수수한 행위가 공동정범들 사이의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돈을 공모에 따라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에 지나지 않더라도 별도로 그 돈의 수수행위에 관하여 뇌물죄가 성립한다.
- ④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일단 횡령행위가 기수에 이르렀고 중극적인 법익침해의 결과가 발생하기 전에 새로운 처분행위가 이루어졌더라도, 당초의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정매에 의한 매각 등 그 근저당권으로 인해 당연히 예상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다면 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1. 배임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배임죄 성립에 필요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 ㉡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로부터 할부로 지입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해당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입회사 운영자는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지입차량에 관한 재산상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지입차주가 그 할부대금을 완납하기 전이라도 마찬가지이다.
- ㉢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따라야 하므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면 경제적 관점에서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더라도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 위원회의 재산을 유지 및 보존,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甲이 ○○축협 조합원들이 ○○군에서 추진하던 신공항 사업을 반대한다는 이유 등으로 ○○군 총무과장 등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위원회 명의로 ○○축협에 예치된 20억 원 상당의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고 그 돈을 ○○농협에 재예치하도록 하였다면 이 사건 위원회의 재산상 손해와 ○○농협의 재산상 이익 사이에는 관련성이 없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권리이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경우 자동차 등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타에 처분하였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2. 손괴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타인 소유 토지에 권원 없이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甲의 이러한 행위는 이미 대지화된 토지에 건물을 새로 지어 부지로서 사용·수익함으로써 토지의 효용 자체가 침해되었으므로 재물 손괴죄가 성립한다.
- ② 甲이 피해 차량의 앞뒤에 쉽게 제거하기 어려운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등을 바짝 붙여 놓은 경우 A가 甲이 놓아 둔 위 구조물로 인하여 피해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일시적으로 본래의 사용목적에 이용할 수 없게 된 이상 차량 본래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 ③ 甲 등이 유색 페인트와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A 소유의 이 사건 도로 바닥에 직접 문구를 기재하거나 도로 위에 놓인 현수막 천에 문구를 기재하여 그 페인트가 바닥으로 배어 나와 도로에 배게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도로 바닥에 여러 문구를 써놓은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 ④ A가 홍보를 위해 광고판(홍보용 배너와 거치대)을 1층 로비에 설치해 두었는데, 甲이 乙에게 지시하여 乙이 위 광고판을 그 장소에서 제거하여 컨테이너로 된 창고로 옮겨 놓아 A가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면 甲의 이러한 행위로 광고판에 대한 물질적인 형태의 변경이나 멸실, 감손이 초래되지 않았으므로 재물손괴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33.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지만,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도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라면 해당 범죄의 정범이 될 수 있다.
- ② 여러 사람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함으로써 그 여러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면 권리자 별로 각각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서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 ③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는 은닉행위를 통해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닌 대리인이나 지배인이 대표기관과 공모 없이 한 행위라도 그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직무에 관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법인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는 대표기관이 한 행위와 법률적·사실적 효력이 동일하고, 법인의 물건을 법인의 이익을 위해 취거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점과 범의 내용 등에 관해서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권리행사방해죄가 규정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 해당한다.

34. 범죄단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을 의미한다.
- ② 「형법」 제114조 소정의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그 후 목적인 범죄의 실행행위를 하였는가 여부는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 ③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 가입행위 또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와 사기행위는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다.
- ④ 범죄단체의 배후에서 일체의 조직활동을 지휘하는 자와 전면에서 단체 구성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자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경우 양인을 모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범죄단체의 수괴로 인정할 수 있다.

35. 교통방해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지만 집회나 시위가 교통방해행위를 수반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 ②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 ③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교통방해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참가한 경우 참가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 ④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한 자는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도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의 책임을 진다.

36. 문서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전산망 시스템에 제공되어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이 이루어지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은 그 법인의 임직원과의 관계에서 「형법」 제232조의2의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 ㉡ 甲이 사무실전세계약서 원본을 스캐너로 복사하여 컴퓨터 화면에 띄운 후 그 보증금액란을 공란으로 만든 다음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여 검정색 볼펜으로 보증금액을 ‘삼천만 원’으로 변조하고, 이와 같이 변조된 사무실전세계약서를 팩스로 송부하였다면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죄가 인정된다.
- ㉢ 甲이 컴퓨터 스캔 작업을 통하여 만들어진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이미지 파일은 전자기록으로서 전자기록 장치에 전자적 형태로서 고정되어 계속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로 볼 수 있다.
- ㉣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컴퓨터 스캔 작업을 통하여 이미지화한 다음 이를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에서 보게 하는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죄를 구성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7.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직권남용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인정된다.
- ②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권리’는 법률에 명기된 권리에 한하고, 법령상 보호되어야 할 일체의 이익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공법상의 권리인지 사법상의 권리인지를 묻지 않는다.
- ③ 공무원이 일반 사인을 상대로 어떠한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사인에게는 직권에 대응하여 따라야 할 의무가 있어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그 직무와의 관련성 혹은 필요성에 기하여 해당 직무의 집행과 관련 있는 다른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전달한 경우라도 이는 당연히 비밀의 누설에 해당한다.

38. 뇌물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령에 기한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 나중에 그가 임용결격자이었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가 임용행위라는 외관을 갖추어 실제로 공무를 수행한 이상 「형법」 제129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대표이사 甲이 건설회사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컨설팅회사 간의 용역계약을 가장하여 건설회사로부터 위 컨설팅회사 계좌로 뇌물을 입금받은 것은 「형법」 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죄로 인정된다.
- ③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공사업자와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수수한 돈은 성격상 뇌물에 해당한다.
- ④ 공무원이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는 경우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다면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9.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과속단속카메라에 촬영되더라도 불빛을 반사시켜 차량 번호판이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 제품을 차량 번호판에 뿌린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행위는 교통단속 경찰공무원이 충실히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통상적인 업무처리과정 하에서 적발이 어려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② 시청 청사 내 주민생활복지과 사무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소란을 피우던 甲을 소속 공무원 A와 B가 제지하며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甲이 A와 B의 목살을 잡고 수회 혼든 다음 휴대전화를 휘둘러 A의 뺨을 때렸다면 이는 시청 공무원들의 적절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아니다.
- ③ 경찰관 P는 도로를 순찰하던 중 벌금 미납으로 지정수배된 甲과 조우하게 되어 벌금 미납 사실을 고지하고 벌금납부를 유도하였으나 甲이 이를 거부하자 형집행장의 발부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구인하는 과정에서 甲이 이에 저항하여 P를 폭행하였다면 甲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④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40. 다음은 무고죄에 관한 설명이다. ㉠~㉣의 내용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무고죄의 범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므로 신고자가 허위라고 확신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뿐만 아니라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 ㉡ 무고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자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충분하다.
-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이므로, 피무고자의 승낙은 무고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 피무고자의 교사·방조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3자의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무고죄를 구성하지만 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자기 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무고자는 교사·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 ① ㉠(O) ㉡(O) ㉢(X) ㉣(X) ② ㉠(O) ㉡(X) ㉢(O) ㉣(X)
 ③ ㉠(X) ㉡(O) ㉢(X) ㉣(O) ④ ㉠(X) ㉡(X) ㉢(O) ㉣(O)